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유도했다.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은 축소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측면에서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조정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40%, 5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42%로 바꿨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은 20%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세목 간 형평성과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2018년부터는 5%, 2019년부터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TC)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을 했다.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D)의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도 인출을 허용했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년간 늘리고 중고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1년간 확대했다.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세율을 인하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의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했다.

■ 세입기반 확충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대기업의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했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표 구간에 '3천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연구개발(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2%로 조정하고 일반 R&D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30%에서 25%로 축소했다.

대기업 생산성 설비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축소했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사업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 귀속분부터는 70%, 2019년 귀속분부터는 60%로 점진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고배당 기업의 주주 배당소득중대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했다.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고 이자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는 '신

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실 신고확인제도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는 등 역외 세원·다국적 기업 관리도 강화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및 기간을 조정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으며,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제 납부수단에 추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공정거래

■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위 수장으로 맞으며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시작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굳어진 분야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했다. 분야별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엄하게 다스렸다.

공정위는 2017년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 불리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LS전선, 하이트진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민생, 공공입찰, 국제카르텔 등 총 69건의 국내외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3천63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소비자기본법도 개정했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렸던 오명을 씻기 위해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도 제정했다.

공정위는 민·형사와 행정적 수단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 TF를 통해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전속 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체계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며 공정위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재벌을 혼내줬다’는 식의 돌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옥의 티였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공정위는 2017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는 데 조직의 힘을 집중했다. 갑을관계가 굳어진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4대 분야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과 관련해 7월 19일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 23개 과제를 발표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보복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받는 리베이트 내역과 구입요구품목, 정보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8월 13일 유통업과 관련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 15개 대책을 발표했다. 부당감액·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이 골자였다. 이어 9월 8일에는 하도급과 관련해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12월 27일에는 전속거래 강요금지, 기술유용 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23개 과제를 추가로 발표했다.

대리점과 관련해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맞춤형 종합대책을 준비했다. 대책 발표뿐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도 엄중히 제재했다.

하도급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약 1천889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유통분야와 관련해서는 백화점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 과징금 총 23억원을 부과했다. 가맹분야는 외식업종 구입요구품목 현황 실태점검,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감시망을 넓혔다.

■ 기업집단국 신설·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재벌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재벌개혁의 의지는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이어졌다.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과 54명 규모로 재탄생했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척결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했다. 3월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그 결과 LS전선의 파운텍 부당지원 제재(과징금 14억원),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제재(과징금 107억원)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9월 도입했다.

■ 담합 등 경쟁제한 제재·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국내의 기업을 막론하고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2017년 엄중히 제재했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 내 모습.

국내 업체의 피해 우려가 큰 경쟁 제한적 M&A를 바로잡았다. 4월 글로벌 화학기업인 ‘더 다우 케미컬 컴퍼니’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의 합병에 대해 일부 자산매각 명령을 내렸다. 11월에는 해운선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와 ‘함부르크 슈드 아메리카니셰 담프쉬프파르츠-게젤사프트 카게’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타 선사와 맺은 제휴(컨소시엄)에서 빠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12월에는 CJ헬로비전이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하니방송을 인수하자 경쟁을 제한하고 방송요금 인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앞으로 2년 동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2017년 민생분야, 공공입찰, 국제카르텔 등 총 69건의 국내외 담합을 적발해 바로잡았다.

민생분야에서 군장병 급식 품목 입찰담합,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야간·휴일 진료 활동 방해,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 담합 등을 적발했다. 공공입찰은 원주-강릉 철도 노반시설 공사 입찰담합,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궤도부설 공사 입찰담합, 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담합 등을 바로잡았다.

국제카르텔과 관련해서는 선물환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모의하고 절반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 자동차 핵심부품 입찰을 담합한 일본 덴스코퍼레이션 등을 적발했다.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3천637억원이었고 검찰 고발 조치는 28건에 달했다.

■ 리콜 강화·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정책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해 안전 대응성을 강화했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소비자안

전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적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했다. 제품 결함으로 생긴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했다.

리콜 제도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강화했다. 외국에서 발생한 리콜 정보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 부처 공통 리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을 완료해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등 새로운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아나갔다.

에어비앤비의 환급 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외 7개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조항이 담긴 약관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련 책임을 강화했고, 모바일 게임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해 보급했다.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가진 권한 나누고 처벌권 힘 실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벌였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로 민·형사, 행정적 수단의 종합적 수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소관 6개 법 중 절반인 유통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독점을 깨기로 했다.

TF는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조치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는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TF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숨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가맹분야 조사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기로 했다.

■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등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

공정위는 시장감독기구로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11월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속기록 공개 및 합의 과정 기록, 사건 진행 및 심사관 전결 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

진술권 보장, 민간 중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처리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자 책임 강화, 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사건처리 팀제 선별적 도입 등을 추진했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위원 면담과정 기록,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정보유출 쌍방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건처리 담당자와 사건 당사자와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내부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외부인은 1년간 퇴출당한다.

■ 공정위 개혁 중심…'김상조 효과'

2017년 공정위 정책의 중심에는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김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자 6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김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해 신임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임명 직후 경제 민주화와 갑을관계 개선을 향한 강력한 대책을 쏟아냈고, 수많은 '을'의 호응을 받았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가 마감 시한인 6월 7일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사진은 오전 열린 전체회의.

김 위원장은 6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11월에는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등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처리했던 사건의 오류를 반성하고 바로잡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TF'를 만들어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처리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오류도 인정하며 김 위원장은 "통렬히 반성한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잇따른 '말실수'로 불필요한 구설에 오르는 등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언행이 다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7월 초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9월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가 이재웅 다음 창업자로부터 “오만하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11월에는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난 후 확대 경제 관계장관회의에 다소 늦게 도착하며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했다가 또 한 번 사과했다.

경제협력

■ 개요

우리나라는 2017년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측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사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중국과는 서비스·투자부문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FTA를 통한 ‘경제영토’ 넓히기에도 힘을 쏟았다.

■ 신기록 쏟아진 2017년 수출

2017년 연간 수출액은 5천739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5.8% 증가했다. 이는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수입은 4천781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7.7% 증가했다. 수출입을 합친 총 무역 규모는 1조520억 달러로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했다. 무역수지는 958억 달러 흑자였다.

연간 수출은 11월 17일 역대 최단기간에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2억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3.6%를 기록했고, 세계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2계단 오른 6위로 상승했다.

연간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3개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57.4%, 석유제품 31.7%, 석유화학 23.5%, 선박 23.6%, 철강 20.0%, 일반기계 10.2%, 컴퓨터 9.6%, 디스플레이 9.1%, 자동차 3.9%다.

반도체는 979억4천만 달러로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1994년 우리나라 총수출보다 많은 것이다.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 47.5%, SSD(차세대 저장장치) 45.6%,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34.4%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도 크게 늘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9.9% 증가했다. 반대로 섬유 -0.4%, 자동차부품 -9.5%, 가전 -22.5%, 무선통신기기 -25.5% 등 4개 품목은 판매 부진과 해외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아세안과 인도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한 지역은 베트남 46.3%, CIS 33.8%, 인도 30.0%, 아세안 27.8%, 유럽연합(EU) 16.0%, 중국 14.2%, 중남미 10.5%, 일본 10.1% 등 8개국이다.

미국 수출은 3.2% 증가했지만, 무역흑자는 완성차 판매 부

진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와 천연가스·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2016년 대비 22.7% 감소한 179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세안·중남미·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 ‘남북 교역축’을 구성하는 신흥시장 수출 증가로 중국(25.1%→24.8%)과 미국(13.4%→12.0%)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등 시장 다변화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 2017년 신규 수입규제 조사 27건…미국이 8건으로 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가 한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4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늘었지만,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10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에서 열린 미국발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미국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무려 8건의 수입규제를 새롭게 개시해 최대 수입 규제국(31건)이 됐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건과 5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8건으로 꺾중 뛰었다. 이는 2위 터키(4건)나 3위 중국(3건)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미국 다음으로 수입규제 건수가 많은 나라는 ‘부동의 수입 규제 1위국’인 인도(30건)로 나타났다.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도 수입 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1건이다.

2017년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16년 만에 부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태양광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 전방위 통상압박 가하는 미국…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

미국은 반덤핑 수입규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우리나라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